

안철수 vs 이광재 與野 중진, '재건축 현안'에 표심 달렸다

22대 총선 격전지

성남 분당갑

주거·교통·판교 공약에 달린 승패
與 안철수, 선도지구 지정 사업 추진
개발제한구역 부분 해제 등 제시
野 이광재, 재건축 분담금·세금 ↓
10년 공임 분양전환주택 문제 해결

서현 1~2동, 이매 1~2동, 야탑1~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을 포함한 경기 성남분당갑의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주거와 교통 그리고 판교에 적절한 공약을 내설득하는 후보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분당갑은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전반적인 인프라 전환의 훈풍이 불고 있다. 분당갑은 노후 아파트에 대한 주민들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수요가 높고 새로운 교통 수요에 대응하는 도로·철도 인프라도 필요하다. 또한 각 후보들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판교'를 더욱 더 발전시킬 방안도 내놓고 있다.

이번 분당갑 선거에선 현역인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는다. 경기 남부에서 민주당의 힘지로 꼽히는 분당갑에서 '대선 주자급'인 안 후보와 '친노 적자'로 불리는 이 후보의 대진표가 짜여진 것.

두 사람 모두 3선 의원이고 이름값도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뉴스시스

높아 분당갑은 경기도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외에도 정의당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한 류호정 후보도 출마한다.

◆재건축 높은 관심… 도시 품격 높이는 주거 공약

각 후보들은 재건축을 앞둔 분당신도시의 특성에 맞춰 효율적인 재건축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먼저, 안철수 후보는 지역에 재건



이광재 전 국회의원사무총장. /뉴스시스

축 선도지구를 다수 지정해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부분적으로 해제해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과도한 재건축 분담금을 감면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도시의 자족기능과 여가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백현MICE(대형복합시

설)을 안정적으로 조기 추진하고 성남 아트센터와 콘텐츠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후보는 분당갑을 남녀노소의 생활이 윈스톱으로 해결되는 '올인빌(All in Vill)'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해 눈에 띈다. 이 후보는 '내가 먹고 자는 곳에서 아이 키우고(보육 교육 시설), 일하고(공유 오피스), 어르신 모시고(경로당), 건강한 삶(스마트건강 관리센터)까지 가능한 마을'로서의 기능이 집약돼 있는 새로운 분당갑을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이 후보는 재건축 공약에 대해서도 분담금 비용과 세금을 인화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현실화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역에서 문제가 되어온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의 할부이자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사통팔달' 분당갑 만들겠다

일자리가 많은 서울 강남,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과도 가까운 경기남부의 요충지 분당, 각 후보들은 '사통팔달' 분당갑을 만들기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 공약도 내놨다.

안철수 후보는 수서-광주 복선전철에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을 반영하고 도시광역버스망을 추가 확충해 시내버스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구간을 연장하고 3호선도 연장하겠다고 했다. 월곶-판교 간선철도의 조기 추진으로 국토의 동서축을 연결하고 GTX(광역급행철도)-A 노선에 성남역 환승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광재 후보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정치력 발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하철 3호선을 수서역, 서판교역, 판교대장역으로 연장하기 위해 노선이 지나는 4개 시와 연석회의를 통해 정치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8호선 추가 지선 건설에 도전하고 성남역에 GTX, KTX, SRT가 지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쓰임새가 좋은 성남종합버스 터미널을 정상화해 교통 활성화와 일자리 확충을 노리겠다고 했다.

◆판교를 첨단산업 '밸리'로

판교를 품은 분당갑답게 두 후보는 분당갑을 첨단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데 입을 모았다. 벤처기업 경영자 출신인 안철수 후보는 야탑밸리 일원에 시스템반도체 중심 '올인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판교지구를 반도체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신규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분교를 판교에 유치하고 카이스트 AI(인공지능) 연구원 등을 신축하겠다고 했다.

이광재 후보는 판교를 인공지능 산업의 집약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판교 내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성과를 주식으로 보상받는 성과조건부주식(RSU) 정착을 세제지원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내외 벤처캐피탈이 참여하는 판교투자밸리를 만들고, 법률·세무·회계 기능을 지원하는 윈스톱지원센터를 세우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물가 2%대 조기 안착위해 모든 정책 총력” 日은행, 마이너스 금리 해제… 17년만에 인상

대통령실서 제13회 국무회의 주제 3%대 오른 것 농산물 가격 강세 원인 “국민들 장바구니 부담 덜어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과 등 치솟는 농수산물값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갖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작년 동기 대비 3.1%를 기록하면서 우리 정부가 2%대의 수준으로 물가 관리를 하려던 선을 조금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물가가 2%대에서 3%로 오른 것은 주로 국제유가와 과채류 등 농산물 가격의 강세가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OECD 주요 국가들도 농산물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했다.

이어 “각국은 실정에 맞는 가격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런 주요 국가의 가격 안정화 대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대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물가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시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려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바우처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내각에서는 총동원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해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여러 나라 정상과 각료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차 회의를 공동 주최한 데 이어 3차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개최한 것은 국제사회가 그만큼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저녁 직접 주재하는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에 관한 세션에 대해 “오늘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같은 부작용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와 민주 정치 시스템을 지키고, 청년들에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확산시키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당분간 완화적 금융환경은 계속”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약 17년 만으로,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대응이 계속돼 온 일본의 금융 정책은 정상화를 위해 크게 전환하게 된다.

지지(時事)통신은 “대규모 금융완화책의 일환으로 실시해 온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해제를 결정했다”며 “임금과 물가가 모두 상승하는 ‘호순환’이 강해져 2%의 물가 상승 목표의 지속적·안정적인 실현이 전망됐다고 판단했다”고 금융정책의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은행이 2016년 1월 도입 결정 이후 대규모 금융 완화 방안의 기둥이었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찬성 다수로 결정함에 따라 이 같은 금융완화정책의 전환은 기업이나 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은행은 0.1%였던 정책 금리를 0~0.1%로 끌어올렸다. 2016년 1월 도입된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의 기둥이었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해제됐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2007년 2월 이후 약 17년 만이다.

또한 장기 금리를 낮게 억누르기 위해 2016년 9월 도입했던 장·단기 금리 조작(일드 커브 컨트롤·YCC), 상장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자신탁(ETF) 등 리스크 자산 매입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닛케이는 “일본은행의 대규모 완화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풀이했다. NHK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세계에서도 이례적 대응이 계속됐던 일본의 금융정책은 정상화를 향해 큰 전환을 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일본은행은 물가 2% 목표를 지속적·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섰다고 판단해 금리 인상에 나섰다. 다만 이번 회의 결정문에는 “당분간 완화적 금융환경이 계속될 것”이라고 명기했다.

또한 YCC 정책 등 철폐 후에도 “지금까지와 대략 같은 정도의 금액으로 장기국채 매입을 계속하겠다”고 적었다. 최근 월 6조엔(약 53조6000억 원) 정도 매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어느 정도 폭을 가지고 매입 예정액을 밝히겠다고 했다.

/뉴스시스